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7
----------	-------

발의연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백혜련 · 박광온 · 홍성국  
오영환 · 신동근 · 박영순  
김영진 · 양기대 · 홍정민  
김진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 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3항).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기준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특례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배분 및 사용,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구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관할

12.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 지정, 조사·측량,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수립·승인취소,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관광 조성사업 준공검사
1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4.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1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16.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p> <p>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p> <p>&lt;신 설&gt;</p> <p>② (생략)</p> <p>제41조(<u>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u>)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 9.(생략)</p>	<p>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p> <p>① ----- 다음 각 호의 기준 대도시----- ----- ----- ----- -----. ----- -----.</p> <p>1. <u>인구 50만 이상 대도시</u></p> <p>2. <u>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u>특례시의 사무특례</u>) <u>특례시의 장</u>-----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배분 및 사용,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u>&lt;신 설&gt;</u>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구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관할
<u>&lt;신 설&gt;</u>	12.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 지정, 조사·측량,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수립·승인취소,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관광 조성사업 준공검사
<u>&lt;신 설&gt;</u>	1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u>&lt;신 설&gt;</u>	14.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행	개정안
<신설>	1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신설>	16.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신설>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제42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 ----- -- <u>특례시</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③ ----- ----- <u>특</u> <u>례시</u> ----- ----- -----

현행	개정안
<p>로 정할 수 있다.</p> <p>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p> <p>① ~ ② (생략)</p> <p>③ <u>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u>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p>	<p>-----.</p> <p>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특례시</u>-----</p> <p>-----</p> <p>-----</p> <p>-----</p> <p>-----</p> <p>-----.</p>